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6월 27일 화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江原日報	02면	규제자유특구 성과 한눈에	1
강원도민일보	08면	규제자유특구 비즈 파트너링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도약 다...	2
江原日報	07면	"모든 사업에 회원 우선·참여 중심 운영"	3
강원도민일보	08면	최상순 신임회장 "강원특자도 성공 건설산업 앞장설 것"	4
강원도민일보	03면	국힘 원주를 조직위원장 후보 8명 가닥 '총선 미리보기'	5
강원도민일보	01면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 최문순 전 지사 직접 지시"	6
강원도민일보	03면	드론택시 사업자 내정설·100억원 환수 책임론 '쓴소리'	6
江原日報	03면	“드론택시 시제기 주관사 배임죄 검토해야”	7
춘천MBC	온라인	강원도 드론 택시 사업, 전임 도정 특혜 의혹 지적	8
G1방송	온라인	강원자치도의회 "차이나드림시티 사업" 질타	9
강원도민일보	02면	[알림]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분권 중심지 역할 모색 포럼	10
江原日報	온라인	춘천시가족센터, 최근 2023 사랑나눔바자회 실시	11
江原日報	19면	[강원포럼] ‘외면받는 교복’ 무엇이 문제일까?	12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 심오섭.박관희.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	13
강원도민일보	16면	[동정] 강정호 도의원	13
江原日報	02면	서울~속초 99분 고속철도 건설 순항	14
江原日報	01면	산불피해지에 쏟아진 '장맛비 공포'	14
江原日報	01면	산불 앞친 데 산사태 덮칠라	15
江原日報	02면	산불피해지에 쏟아진 '장맛비 공포'	15
강원도민일보	02면	군사보호구역 변경·해제 '직접 건의' 통로 마련 유의미	16
강원도민일보	02면	김진태 지사 주재 국비확보 전략회의 "내년도 목표 9조500...	16
江原日報	02면	접경지역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힘 모은다	17
江原日報	05면	이른 더위에 장마까지 '식중독 폭증'	18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자치도 재정대책 다각적으로	19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정부 '일 오염수' 대국민 설명 있어야	20
江原日報	19면	[사설] 여야, ‘日 오염수 방류’ 대결 접고 대책을 내놔야	21
江原日報	19면	[사설] 도내 빈 점포 급증 … 지역상권 붕괴 막을 대책을	22

江原日報

2023년 06월 27일 (화)

종합 02면

규제자유특구 성과 한눈에

‘비즈 파트너링’ 행사 개최

강원특별자치도와 중소벤처기업부, 강원테크노파크는 26일 춘천 ORA호텔베어스에서 ‘2023 규제자유특구 비즈 파트너링’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허영·노용호 국회의원, 김현영 강원대 총장, 윤종욱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이기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기간 연장 등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장현 강원TP 원장은 “도내 산업 전반에 걸쳐 규제를 지속 발굴해 제거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아이엠랩(대표:권예람), ㈜리틀원(대표:이병규)이 각각 2,000만원의 챌린지 안착화 지원금을 받았다. 이어 강원자치도, 강원TP, 벤처캐피탈사(VC) 등 8개 기관이 투자활성화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특별강연에서는 이주연(도 기업호민관) 아주대 산업공학과 교수, 박정환 메쥬 대표, 임병을 아이피오브릿지 대표 등이 기업 규제 혁신 성과, 투자 성공 전략 등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실내에는 도내 4개 규제자유특구의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홍보 부스가 마련돼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강동희기자 yulnyo@



◇26일 춘천 ORA호텔베어스에서 열린 ‘2023 규제자유특구 비즈 파트너링’에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허영·노용호 국회의원, 김현영 강원대 총장, 윤종욱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허장현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이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신세희기자 and8729@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3년 06월 27일 (화)

경제 08면

규제자유특구 비즈 파트너링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도약 다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규제자유특구를 활용, 미래산업글로벌 도시의 중심으로 도약할 것을 다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춘천 ORA호텔베어스에서 '2023경제 규제자유특구 비즈파트너링' 행사를 개최했다.

강원지역은 디지털헬스케어, 액화수소산업, 정밀의료산업,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등 전국 최다 규제자유특구를 운영 중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해 권혁열 도의장, 허영·노용호 국회의원, 윤종욱 강원중소벤처기업청장, 허장현 강원테크노파크 원장 등과 규제자유특구 관련 기업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 공명파트너스 등 국내 우수 벤처캐피털 6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규제사업특구 사업화 챌린지의 최우수 기업인 아이엠랩(대표 권예람)과 우수기업 리틀원(대표 이병규)에게 각각 2000만원의 지원금을 수여했다.

도는 이날 행사에서 도내 규제자유특구 사업 추진과 성과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정우진 jungwojin@kado.net

江原日報

2023년 06월 27일 (화)

경제 07면

“모든 사업에 회원 우선·참여 중심 운영”

건설협회 도회장 이취임식

최상순 회장 4년 임기 시작

김진태 도지사 등 250명 참석

최상순 대한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장이 26일 취임식을 갖고 4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대한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가 이날 춘천 스키컨벤션에서 개최한 제22대·제23대 회장 이·취임식에서 오인철 회장이 이임하고 최상순 회장이 취임했다. 팜페라 여성그룹 클라라의 축하공연으로 시작된 이·취임식은 기념영상 상영, 공로패 및 감사패 전달, 협회기 이양 순으로 진행됐다.

최상순 회장은 취임사에서 “강원도가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했다. 변화의 시작점에 회장직을 맡게 돼 무한한 영광과 무거운 사명감을 갖게 된다”며 “모든 사업에 회원이 우선되도록 참여 중심 운영을 약속한다. 항상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오인철 이임회장은 “지난 8년 간



◇대한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 회장 이·취임식이 26일 춘천 스키컨벤션 컨벤션홀에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신경호 교육감, 허영·노용호 국회의원,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신영재 홍천군수, 이창우 춘천부시장 등 내빈과 최상순 대한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 신임 회장 등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최두원 인턴기자

회장직을 수행하며 업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회원들이 함께해 주고 성원해 주었기에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협회와 강원 건설산업의 발전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태 지사, 권혁열 도의장, 신경호 교육감, 허영·노용호 국회의원, 박진오 강원일보 사

장, 이병철 강원지방조달청장, 고광만 춘천상공회의소 회장, 송문숙 강원여성경영인협회장 등 내빈 30명과 회원 25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김진태 지사는 축사를 통해 “강원도 GRDP 중 건설업 비중은 9.7%를 차지할 정도로 크다. 건설업 발전을 위해 강원도에서도 SOC 예산을 늘리고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최상순 회장의 취임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권혁열 도의장은 “강원 건설인들이 보다 나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로 취임한 최상순 회장도 역대 회장들의 업적을 이어받아 강원 건설을 잘 이끌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현이기자 haha@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3년 06월 27일 (화)
경제 08면

대한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 제22대 오인철 회장 이임식 및 제23대 최상순 회장 취임식이 26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웨딩에서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신경호 도교육감, 허영·노용호 국회의원, 김종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이기찬 도부위원장, 신영재 흥천군수, 이병철 강원조달청장과 내빈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영

최상순 신임회장 “강원특자도 성공 건설산업 앞장설 것”

건설협 강원특별자치도회장 이취임
협회명 개칭·회원 중심 운영 강조

대한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장이 취임식이 26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웨딩에서 열려 제21·22대 오인철 회장이 이임하고 최상순 제23대 회장이 취임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신경호 도교육감, 허영·노용호 국회의원, 김종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이기찬 도부위원장, 박기영 도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영재 흥천군수, 이병철 강원조달청장 등 내빈과 회원사 대표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26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웨딩에서 열린 대한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 회장 이·취임식에서 오인철 이임회장(사진 오른쪽)이 최상순 취임회장에게 협회기를 전달하고 있다.

서영

오인철 이임회장은 “어느덧 8년이란 시간이 지났고, 회장직을 수행하며 업계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난관을

극복하고 얻은 특별한 추억들이 기억에 남는다”며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우리 회원 모두 일치단결한다면 업계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순 신임회장은 “새로운 자치시대 출범에 맞춰 우리 협회도 명칭을 대한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로 개칭하고 새롭게 도약하고자 한다”며 “회원 중심의 협회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이어 “모든 사업에 회원이 우선되도록 참여 중심의 운영을 약속한다”며 “새로운 강원, 특별자치시대 성공을 위해 우리 건설 산업이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우진 jungwoojin@kado.net

▶ 영상 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년 06월 27일 (화)

종합 03면

국힘 원주를 조직위원장 후보 8명 가닥 ‘총선 미리보기’

오늘부터 이틀간 접수... 내달 확정

장기 공석 중인 국민의힘 원주를 선거구 조직위원장 공모가 27, 28일 이틀간 실시된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이 기간 원주를 포함 전국 36곳의 선거구를 대상으로 후보자에 대한 원서를 접수, 7월 중 면접 등을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원주를 조직위원장은 이미 지난해 12월 공모에서 권이중 변호사, 박동수 변호사, 안재운 미래교육아카데미 대표, 윤용호 대한생활체육회 회장, 장승호 한국도시발전연구소 대표, 전병선 전 원주시의원 등 6명이 참여한 가운데 면접까지 실시됐지만 둘

연위원장 인선이 전면 보류되면서 6개월여만에 재공모 절차를 밟게 됐다.

이번 공모에는 기존 도전자 6명 이외에 현역 도의원 김기홍 부의장(3선)과 최재민 도의원(조선)이 합세할 예정이어서 ‘미리보기’ 총선 공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원주를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현역의원(재선)에 연이어 패하며 열세를 보이고 있어 지역위원장 인선에 더욱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다. 이때문에 원주를 조직위원장 인선은 7월 중 중앙당 조강특위에서 최종 확정되지만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현 도당위원장과 차기 도당위원장으로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예상되는 박정하(원주갑) 의원

의 의중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민의힘 조강특위는 당연직인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사무총장과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배현진 조직부총장을 비롯해 추천직인 박진호 경기 김포갑 당협위원장, 함경우 경기 광주갑 당협위원장으로 구성돼 있다. 박창현 chpark@kado.net

2023년 06월 27일 (화)

종합 01면

강원도민일보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 최문순 전 지사 직접 지시”

강원특자치도의의회 특위 총점검서

사업총괄 산업국장 질문 답변

“당초 직접개발 계획없었다”강조

전·현직 도정 갈등 표면화 조짐

속보=도비 100억원을 투입하고도 한수가 불투명한 드론택시(UAM) 시제기 개발사업(본지 6월 7일자 2면 등)을 두고, 책임의 화살이 최문순 전 지사로 또 다시 향하면서 전·현직 도정 간 갈등이 표면화될 조짐이다.

특히, 김진태 도정에서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사업,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1지구사업 등 최문순 도정 당시 추진됐던 역점 현안 사업에 대해 강원도감사위원회 감사에 이어 수사 의뢰까지 이어지면서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강원 공직사회에 후폭풍이 불기 피할 전망이다.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사업 건과 관련해 도감사위는 이날 초, 강원경찰청에 최 전 지사와 김성인 전 강원테크노파크원장을 수사의뢰했다. 이와는 별개로 강원테크노파크는 시제기 개발사업을 전담한 디스이즈엔지니어링(TIE)을 형사고발 및 추천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해당 업체 통장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재정효율화특별위원회(위원장 하석균)는 26일 회

의를 열고 드론택시 시제기(시범 모형)사업을 총점검했다. 총괄업체 내정설, 100억원 환수 책임론 등을 따져본 가운데, 발언다수는 최 전 지사를 향했다.

이날 윤인재 산업국장은 ‘당초 실무진은 시제기 개발을 할 계획이 없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윤 국장은 에너지과장, 첨단산업국장을 역임하며 사업을 총괄했었다. 윤 국장은 ‘사업 초기부터 문제점이 많이 거론됐는데, 실무진에서도(추진이 어렵다는) 어필을 강하게 했느냐’(심오섭)는 질의에 대해 ‘최초에 실무진에서는 시제기 개발을 직접 할 계획은 없었다’고 했다.

또, ‘15시간 연속비행하는 수소드론을 계획했는데, 지금 보기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느냐’(최승순)는 지적에는 ‘실무진에서 검토를 할 때, 시제기 개발이 포함됐던 건 아니다’라며 “2020년 4-5월쯤 최초보고서에는(시제기 개발이 포함)이 안 된’ 그런 내용으로 기획 보고가 나왔다. 그걸로 같을 거다”고 책임론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도감사위가 제기한 ‘TIE 내정설’을 따져본 질문은 윤 국장은 “(내정설에 대해) 여기서 당시 실무과장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이날 초도감사위원회가 발표한 ‘최 전 지사 최초 지시’ 등도 다시 언급했다. ‘지사가 TIE를 데려와서 이 회사와 같이 하자고 했느냐’(김기홍)는 질의

에 “그 회사가 있는 지역을 방문, 회사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발 지시가 최초에 있었다”고 답했다.

이무철 의원은 “공교롭게 지난해 지방선거(6월 1일) 바로 며칠 전인, 5월 말에(업체지원금) 131억이 지급이 된다”며 선거 등 정치 이벤트의 연관성을 제기했다.

한편 도는 사업비 131억 3700만원 가운데 108억 9000만원을 환수 대상으로 책정했다. 이중 100억원이 TIE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설화

▶관련기사 3면

2023년 06월 27일 (화)

종합 03면

강원도민일보

드론택시 사업자 내정설·100억원 환수 책임론 ‘쓴소리’

도의회 재정효율화 특위서 지적

도, 시제기 업체 TIE 환수 ‘난항’

대표 배임죄 고발 등 검토 주문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가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 총괄업체 ‘디스이즈엔지니어링(TIE)’ 지원금 지급부터 ‘계좌 가압류’ 등 사후 조치까지 드론택시 사업 전반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TIE는 도감사위가 최문순 전임 도정의 ‘사전 내정설’을 제기한 업체다. 그에 따르면, 100억원의 지원금을 받은 TIE는 사업이 중단되고도 집행액 정산 등 환수 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다.

도의회 재정효율화 특위(위원장 하석균)는 26일 도산업국을 대상으로 드론택시 시제기(시범 모형) 개발 사업 전반을 따져봤다.

이날 도가 도의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사업에 투입한 도비 131억 3700만원 가운데 80%에 달하는 100억원이 TIE에 지급됐다. 이날 도의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재정효율화 특위(위원장 하석균)는 26일 도의회 상임위에서 드론택시 시제기(시범 모형)사업 총괄업체인 디스이즈엔지니어링(TIE) 내정설, 100억원 환수 책임론 등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변을 종합하면, TIE에 지급한 100억원의 지원금 지급 계좌에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사업을 진행한 강원테크노파크가 TIE측을 횡령죄 등으로 고발하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특위 위원들은 TIE의 100억원 환수를 위한 도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미선(비례) 의원은 ‘TIE 가압류 대상이 통장 계좌’라는 윤인재 도 산업국장의 답변에 ‘실효성이 크게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TIE 대표 등에 대한 배임죄 고발 등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무철(춘천) 의원은 ‘협약에 따르면, 운영비나 인건비는 TIE가 자부담 하기로 했다. 조사 내역이 있느냐’고 물

었고, 이에 윤 국장은 ‘회계법인에서도 분석이 안 됐다. 그쪽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엄기호(철원) 의원은 ‘주식, 부동산 등 다른 재산도 있지 않느냐’고 가압류 대상을 늘릴 것을 주문했고, 김희철(춘천) 의원은 ‘통장 잔액은 없으면 그 만이다. 예의주시하고 압박을 해서 기

업자산을 빨리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TIE의 지원금 지급 결정 과정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박호균(강릉) 의원은 ‘대기업에 지원할 때도 최소한의 담보가 필요한데, 경영평가도 없이 벤처기업에 100억원을 지원했느냐’며 비판했다.

최승순(강릉) 의원은 ‘7명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 결과, 5명이 사업에 부정적이었다. 그럼에도 추진했다’며 ‘제2의 드론택시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재석(동해) 의원은 ‘앞으로 소신을 갖고 하진 건 아니다’ 하는 목소리가 나왔으면 좋겠다’며 ‘도민들은 그런 공직자상을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는 TIE를 제외한 업체 5곳에 지원한 23억원도 ‘갓다 바친’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도는 도의회에서 사업 컨소시엄 구성 업체 5곳으로부터 이미 집행한 23억 2600만원을 제외한 지원금 잔액 8억 8000만원을 환급받았다고 보고했다. 이설화 loli@kado.net

2023년 06월 27일 (화)

종합 03면

江原日報

“드론택시 시제기 주관사 배임죄 검토해야”

자치도의회 재정효율화특별위, 사업비 환수문제 등 질타
“주민 반대하는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 보완조치 마련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재정효율화 특별위원회는 26일 도의회에서 회의를 열어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 관련 추진 상황과 정동진 차이나드림 시티 조성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최문순 전 지사의 역점사업이었던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사업’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의 감사 결과와 관련,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피는 발언이 이어졌다.

임미선(국민의힘·비례) 도의원은 “주관사업자인 디스이즈엔지니어링에 사업비를 환수받는 절차 중인데, 형사 고소 내용을 보니 횡령죄만 있다”며 “사업에 대해 손해를 끼친 것이 배임죄 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기술 검증 용역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최재석(국민의힘·동해) 도의원은 “도의회 예산 승인 조건이 기술 검증 용역이었는데 이를 따르지 않았다”면서 “의회라는 대의 기구를 농락하는 행위라고 본다”고 질타했다.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가능성과 토지 문제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다.

이무철(국민의힘·춘천) 도의원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개발될 가능성

이 없어 보이는데 사업을 하지 않게 될 경우에 안전장치가 있느냐”면서 “사업 무산 시 국민들이 받을 피해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업무 보고 절차도 문제로 제기됐다. 박호균(국민의힘·강릉) 도의원은 “관광지구로 특구 지정이 돼 있어도 별도의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 필

요하고 임야 평균 경사도 등이 파악돼야 할 텐데 전혀 파악한 것이 없으면서 업무 보고를 한 것은 문제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최승순(국민의힘·강릉) 도의원은 “전임 도정에서 집행하던 동해 망상 지구도 투자 유치가 결국 실패했는데, 지금 이 사업은 현재 진입로 확보도 안된 상황”이라며 “지역 주민들도 반대하는 상황에서 도에서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기자 together@kwnews.co.kr

춘천MBC

2023년 06월 26일 (월)
강원

강원도 드론 택시 사업, 전임 도정 특혜 의혹 지적

강원도의회 재정효율화특위에서 강원도의
드론 택시 사업과 관련해 전임 도정의
특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재석 도의원은 설계 단계부터 사업자로
특정 업체가 내정된 의혹이 있다며
전임 도지사의 지시 없이는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승순 도의원도 어떤 지시로 이 사업이
진행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당시 테크노파크에
사업을 위탁하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한
책임을 인정한다며 전임 도정에 대한 의혹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승호

bsh@chmbc.co.kr

G1방송

2023년 06월 26일 (월)
강원

강원자치도의회 "차이나드림시티 사업" 질타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재정효율화 특별위원회가 제1차 회의를 열고,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 조성사업의 향후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질타했습니다.

이무철 도의원은 "사업 추진 부서도 사업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사업 무산에 대비해 도 피해 최소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최승순 의원도 "지역 주민이 반대하던 차이나드림시티 사업이 추진된 이유를 모르겠다"며 "투자라고 보기보다는 투기라고 보는게 합리적일 것 같은데 도가 제재를 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창석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국장은 "토지 시세 차익에 따른 부당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6월 27일 (화)

종합 02면

알림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분권 중심지 역할 모색 포럼

자치분권을 선도해 온 강원도민일보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국제 행사인 '2023 강원 자치분권 글로벌 포럼 (2023 Gangwon Decentralization Global Forum·GDGF)'을 성공 개최했습니다. 2023 GDGF를 통해 일본·스위스·프랑스 등 자치분권 선진국가와 특별자치시·도로 묶인 강원·제주·세종·전북은 지역과 국가를 뛰어넘은 '자치분권 글로벌 연대 협력'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민일보는 강원연구원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분권 중심지 역할 모색' 포럼을 열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 분석 및 강원특별법 3차 개정과 관련한 부문별 과제를 선제적으로 점검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행사: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분권 중심지 역할 모색' 포럼
- 일시: 2023년 6월 29일 (목) 오후 2시
- 장소: 강원연구원 리버티홀
- 주최: 강원도민일보·강원연구원
- 후원: 강원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의회
- 주제발표: 1.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강원도민 여론조사 결과 분석-천남수 강원사회연구소장 2.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한 부문별 과제-양철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
- 좌장: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 토론: △김길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특별자치도지원특위 위원장 △김범수 강원연구원 분권연구실장 △박용식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국장 △정홍백 한국은행 강원본부 기획조사부장
- 문의: 강원도민일보 정치부 033)260-9221

江原日報

2023년 06월 26일 (월)

종합

춘천시가족센터, 최근 2023 사랑나눔바자회 실시



춘천시가족센터(센터장:임미라)는 최근 센터 1층 주차장에서 홀트다문화 강원후원회(회장: 강명희 춘천그린식품 대표)가 주최한 '2023 사랑나눔바자회'를 열었다. 이날 수익금은 중증 장애아동 지원 및 다문화결혼식 후원기금 마련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춘천시가족센터는 최근 센터 주차장에서 '2023 사랑나눔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홀트다문화 강원후원회의 주최로 열려 중증장애아동 지원 및 다문화결혼식 후원기금 마련을 목표로 성황리에 진행됐다. 강명희 후원회장(춘천그린식품 대표)이 닭갈비 165개를 기부한 가운데 동해 누가이비인후과, 디너출장부페, 수협은행 춘천지점 등 지역 내 26개 업체가 후원해 참여해 힘을 보탰다.

임미라 센터장은 "후원회는 매년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송편 빚기, 장담그기 등 다양한 활동을 돕고 있다"며 "이번 바자회의 수익금은 대상을 확대해 중증장애아동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사에는 박기원.양숙희 도의원, 이무철 시의원, 원현순 김진태 도지사 부인, 정현자 허영 국회의원 부인 등이 참석해 도 특산물 구매 등에 앞장섰다.

江原日報

수년째 계속되는 ‘학생들의 교복 외면 사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학생들의 외면 이유는 간단하다. ‘불편하다’라는 것이다. 불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활동이 자유롭

지 않다’, ‘소재가 안 좋다’, ‘예쁘지 않다’, ‘겨울엔 춥다’, ‘키가 커서 안 맞는다’ 등 다양한 이유가 나타난다. 이런 사실을 학교, 학부모, 교사, 교육청, 지자체도 알고 있다. 그런데도 수년째 문제는 반복된다. 그렇다면 문제를 알고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속사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자.

첫째는 정책을 주관하는 주체가 불명하다는 점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무상 교복 예산을 교육청이

65%, 도가 20%, 시·군이 15%를 분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행 무상 교복 지원 시스템에 변화를 주려면 삼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고, 또 변화를 주장하는 기관은 분담 비율 증가를 감수해야 하기에 어느 누구도 선뜻 변화를 주도하기 어려운 구조다.

둘째는 ‘현물 지원에 한함’이라는 무상 교복 지원 정책의 비현실성이다. 현물 지원 정책이 학부모의 교복비 부담 경감이라는 당초 목적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현행 강원자치도의 경우 교복 자활화가 아닌 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 학

강원포럼

이승진 도의원



교가 지정하는 복장 외에는 착용이 불가하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무조건 세 가지 복장 중에서 구입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왜 ‘교복’이라는 현물로 꼭 고집해야 하는 걸까. 이러한 현물 고수 정책이 공동구매로 이어지면서 업체들의 담합, 서비스 불량, 소재 불량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불만을

2023년 06월 27일 (화)

오피니언 19면

결까? 문제 진단은 하고 있으나 피드백 시스템으로의 작동이 아닌 일방통행식이 아니었을까? 무상이다 보니 학생도, 학부모도, 학교도 선뜻 문제점을 제기하기 어렵고 하기도 꺼린다. 그러나 교

복 문제는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일선 학교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 수년간 지속돼 온 문제에 대해 ‘무조건 써야 한다’는 식의 눈먼 예산이 되지 않도록 의견 수렴 절차가 절실하다.

문제를 회피하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기에 문제 해결을 위한 사전 조치로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하나는 도내 중·고교생, 교직원, 학부모를 대

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교육청, 도, 시·군이 합의

만 된다면 설문조사는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하나는 강원자치도 교육감에게 간청하고 싶다. “만나 보셔라.” 모든 교육의 주체는 학생이다. 모든 학생을 만나기는 불가하니 권역별로 학교 회장들을 방문 내지 초대해 “만나 보셔라.” 그리고 온라인으로 교육감과 면담을 원하는 학부모의 신청을 받아 적정 인원을 선발해 “만나 보셔라.” 만나봐야 현장의 소리가 들리지 않겠는가. 무상 교복 정책에 대한 관심이 일회성에 그친 채 또다시 유아무야 넘어가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외면받는 교복’ 무엇이 문제일까?

초래하는 원인의 하나로 보고 있다.

셋째는 문제를 진단하려는 피드백 시스템 구축 및 작동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이다. 교육청에서는 교복과 교복 업체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주관구매 교복 업무 매뉴얼’을 때마다 개정·보완하고 있으며 교복에 대한 예상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학교마다 ‘교복선정위원회’도 구성하고 있다. 또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교복 사업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사항은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사업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江原日報

2023년 06월 26일 (월)
종합**[동정] 심오섭.박관희.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
의원**

심오섭 강원특별자치도의원(강릉)은 27일 오후 1시 도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리는 2023년 제 20기 핵심리더 특강에 참석.

박관희 강원특별자치도의원(춘천)은 27일 오후 1시30분 엘리시안 강촌에서 열리는 제19회 강원도 시각장애인 한마음 하계캠프에 참석.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속초)은 27일 오전 10시40분 속초 롯데리조트 대연회장서 열리는 국제로타리 3730지구 36대.37대 총재 이.취임식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3년 06월 27일 (화)

인물동정 16면



강정호도
의원은 27
일 오전 10
시 40분 속
초 롯데리
조트에서 열리는 로타
리 3730지구 37대 총재
취임식에 참석한다.

江原日報

2023년 06월 27일 (화)

종합 02면

서울~속초 99분 고속철도 건설 순항

국가철도공단이 올해 강원권 철도 사업에 8,508억원을 투입한다. 2027년 서울~속초 99분 주파, 최북단 고성 제진부터 부산까지 동해선 완전 연결을 위한 철도망 확충계획이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

26일 공단에 따르면 강릉에서 양양, 속초를 거쳐 고성(제진역)까지 111.7km를 잇는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 건설 사업에 올해 2,828억원을 투자한다. 동해북부선의 총 사업비는 2조7,418억원이다. 2027년 이 철도가 개통되면 동해안 남·북(부산~울산~포항~삼척~강릉~고성) 통합 철도망이 구축된다. 동·서(원주~강

철도공단 올해 강원권 사업에 총 8,508억원 투자
동서고속철·강릉~제진·여주~원주 탄력 기대

릉, 춘천~속초)고속교통망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미래에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을 통해 교통·물류·에너지 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춘천~속초 93.7km를 고속철도로 잇는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건설 사업에는 올해 2,275억원(총 사업비 2조4,707억원)이 들어간다. 지난해 1공구와 7공구의 계약 및 착공식을 마친 상태다. 2027년 개통 시 서울

용산에서 속초까지 99분에 주파할 수 있다. 현재 용산~춘천~속초를 ITX와 버스를 이용할 때 걸리는 195분보다 96분이 단축된다.

여주~원주 복선전철 사업은 총 사업비 9,255억원을 투입해 여주와 원주 22.2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올 하반기 착공,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확보한 사업비는 795억원이다. 여주~원주 복선전철과 월곶~판교 구간을 이으면 인천에

서 강릉까지 동서를 가로지르는 횡단철도망이 구축된다. 중앙선 원주~제진 복선전철 사업은 총 사업비 약 1조2,109억원을 투입해 원주역에서 제진역까지 44.1km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2021년 1월 개통했다. 올 12월 최종 준공을 위한 역사 진입도로 확장 등에 38억원이 투입된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촉촉한 철도 교통망을 완성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성장 동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한반도를 넘어 시베리아와 유럽으로 이어지는 대륙철도 교두보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기영·허남윤기자

江原日報

2023년 06월 27일 (화)

종합 01면

산불피해지에 쏟아진 ‘장맛비 공포’

산사태·침수 취약지 방치

강릉 ‘긴급 벌채’ 대상지 62ha
국비 녹장 집행에 8ha만 완료
산지 사방 사업도 7월이나 시작
2차 피해 우려에 주민들 불안

“산불 이후 비만 내렸다 하면 뒷산에서 흙탕물이 쏟아지네요. 장독대 놓기도 불안하네요.”

26일 오전 강릉 산불 피해지인 저동에서 만난 김모(70)씨는 소나무가 내린 하늘을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주택가 뒷산은 산불로 시커멓게 그을린 20~30m 높이의 소나무들이 그대로 있었다. 이웃인 김모(75)씨는 하수구를 막은 잔나무 가지와 쓰러진 기를 치우기 바빴다. 산불에 타고 남은 잔해물이 빗물에 쓸려 내려왔다. 그는 “축대나 옹벽 설치가 시급한데 복구 작업은 시작도 못하고 있다. 역대급 장마가 온다는데 산사태, 토사 유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산불 피해목을 바라보는 눈길도 불

안했다. 한모(60)씨는 “산불로 지반이 약해졌는데, 뿌리에 힘을 잃은 소나무들이 쓰러져 주택을 덮칠까 겁이난다”며 “이번 산불도 ‘쓰러진 소나무로 인한 전선 단선’이 원인이었다고 또 반복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본격 장맛비가 시작됐지만 강원 지역의 침수 및 산사태 취약지는 방치돼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

다.

▶관련기사 5·13면

26일 강릉시에 따르면 강릉 산불 긴급 벌채 대상 면적 62ha 가운데 8ha만 벌채가 완료됐다. 사업비 전액(21억원)이 국비로 추진되는데, 아직 집행되지 않아 시 예산을 들여 일부만 벌채했다.

산사태 예방, 산지 사방 사업도 마찬가지다. 28개소 9.24ha 면적에 웅

벽, 큰 돌 등을 쌓는 사업은 7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시는 일단 방수포, 토낭 쌓기 등 응급 복구를 해놓은 상태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포비’와 태풍 ‘힌남노’ 피해를 입은 지역도 복구가 진행 중이다. 신하림·류호준기자

2면에 계속

江原日報

2023년 06월 27일 (화)

종합 01면



산불 옆친 데 산사태 덮칠라 장맛비가 내린 26일 강릉시 안현동 산불피해 철거지역 비탈면에 산사태를 막기 위한 천막이 덮여 있다. 강릉=권태명기자

江原日報

2023년 06월 27일 (화)

종합 02면

산불 피해지에 쏟아진 '장맛비 공포' -1면에서 계속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호우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68개소 중 6곳은 아직 복구를 마치지 못했다. 도로, 지방하천, 사유림 등이다. 도심 주택가에도 불안 요인은 여전하다.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반지하 주택 41곳 중 26곳만 물막이판과 역류방지시설 설치가 완료됐다. 춘천(12곳), 강릉(3곳)의 반지하 주택은 이번 주 중에 설치될 예정이

다. 강원자치도는 하천 인근의 아파트 단지 24곳에 물막이판을 지원했다. 하지만 도내 아파트에 지급된 물막이판은 '이동식'이어서 관리사무소가 긴급 설치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백민호 강원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산불 피해지는 집중호우에 매우 취약하다"며 "침수 피해는 반복되는 만큼 기존 피해지를 위주로 긴급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6월 27일 (화)

종합 02면

군사보호구역 변경·해제 '직접 건의' 통로 마련 유의미

강원특별법 특례 대해부

군사분야 특례 전국 첫 모델

도지사가 관할부대장에 건의

임의규정 한계 후속개정 시급

⑤ 군사분야특례

강원특별법 군사 분야 특례의 핵심은 강원특별자치도가 민간인통제선 또는 보호구역 지정·변경 및 해제에 대해 국방부와 군(軍)에 직접 건의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다만, 특례 대부분이 '건의할 수 있다' 등 임의규정으로 되어있어서 3차 후속개정이 시급하다.

▶자문=강원특별자치도 규제혁신과·접경지역 지자체

-군사분야주요 특례는.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민간인통제선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변경, 해제를 건의할 수 있게 하는 조항(제70조)이 있다. 협의 통로를 마련한 것이다. 또, 국방부가 도지사에게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조항(제71·73조)도 있다. 군사보호구역 조정에 대해선 도지사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군사 분야 주요 특례

-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관할부대장에게 민간인통제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건의 가능
- 국방부장관은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 접경지역 군부대가 지자체 먹거리통합지원 센터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명시

직접 관할부대장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군(軍) 급식 수의계약을 유지하면서, 질 좋은 농산물이 군 장병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담았다. 특히 접경지역 군부대가 지자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미활용 군용지를 공공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강원특별법 군사분야특례의 의미는.

"강원특별법 군사 분야 특례는 전국 첫 모델이다. 군사보호구역 지정·변경 및 해제 등에 대해 직접적인 건의 통로를 만든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접경지역 주민들이 하소연할 수 있는 통로가 이번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부분들을 조율하면서 가능한 특례를 우선 풀어냈다. 안보에 지장이 없으면서도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것들을 입법화했다. 특히 접경지역지원특별법과 17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평화경제특구법을 군사분야 특례로 함께 접목할 수 있는 것들을 살펴 세부안을 채워나갈 계획이 있다."

-속초시장사동 주민들이 인근군부대 시설물로 32년간 고도 제한에 묶여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고도제한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특례 적용되나.

"아쉽게도, 고도제한 해제 관련 특례는 담기지 못했다. 군부대 특성상 국가안보 문제로 풀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군사분야 미반영 특례는.

"접경지역 내 민간군복합단지 조성 특례 반영을 추진했으나 군사 작전 등 안보, 재정 문제 등이 얹혀 미반영됐다. 국방부와 군 부대에서 활용해온 군용지는 모두 세금으로 관리돼 왔는데 부지를 안 쓰게 되면 지자체에 환원을 해달라는 게 접경지역의 요구였다. 그러나 미활용 군용지 활용에 대한 직접적인 특례가 담기지 못해 3차 후속개정이 시급하다. 특히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는 협의위탁구역 확대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의 특례로 답아야 한다." 박지은

강원도민일보

2023년 06월 27일 (화)

종합 02면

김진태 지사 주재 국비확보 전략회의의 "내년도 목표 9조5000억원"

강원특별자치도는 26일 국비확보 2차 전략회의를 가졌다.

이번 국비확보 전략회의는 김진태

도지사 주재로 열린 가운데 최근 도청에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참석해 열린 예산정책협의회 이후 열려 주목 받았다.

이날 도가 공개한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9조 5000억원이다. 이에 대해 김지사는 "도민들께서 '특별자치도가 됐으니 국비를 더 많이 받아오는구나' 기대감이 크지만, 나라 세수가 부족하고 부채도 늘어나 쉽지 않다"며 "여당 원내대표단 방문 당시 강원도 국비 10조원을 얘기했는데, 9조 5000억원

을 목표로 잡았다"고 했다.

김지사와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영 경제부지사 등 도지휘부와 각 실·국장은 내년도 주요 사업의 국비 확보 전략을 논의하며, 8월까지 진행되는 기획재정부 예산심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정부안 최대 반영을 관철시키기로 했다. 도는 연례반복적이고 법정 업무를 제외한 2조 1329억원 규모의 200여개 주요 사업을 각 중앙부처에 신청했다. 한편 강원도가 확보한 2023년도 국비 확보액은 9조 193억원 규모로, 도정 사상 첫 국비 9조원 시대를 열었다.

김덕형 duckbro@kado.net



강원특별자치도 국비확보 회의가 26일 도청 별관회의실에서 김진태 도지사와 도청 각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영

江原日報

2023년 06월 27일 (화)

종합 02면

접경지역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힘 모은다

철원·홍천·화천·고성 공동대응센터 업무협약

국방개혁2.0과 초고령화 등으로 인한 접경지역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4개 지자체가 힘을 모은다.

철원군과 홍천군, 화천군, 고성군 등 접경지역 4개 군은 26일 오후 1시 철원군청 2층 상황실에서 접경지역 인구감소 공동대응센터 업무협약을 했다.

4개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구감소 대응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접경지역 인구감소 공동대응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신규 사업 및 특례 발굴, 이를 통한 우수사

례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 인구시책 추진을 위한 지자체의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지역별 연계와 협력을 통한 사업 거점화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접경지역 지자체는 국방개혁2.0과 초고령화 등으로 뚜렷한 인구 감소세를 보이는 등 붕괴 위기에 놓여 있다. 철원의 경우 2018년 4만7,000명 선이 무너진 이후 4만명 선이 위협받고 있고, 화천지역 인구 역시 국방개혁2.0이 시작된 201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000여명 안팎의 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권용길 철원군 기획감사실장은 “접경지역이라는 공통적인 규제 상황과 인구감소 및 초고령화 현상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4개 군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공동의 목표를 이루고 강원특별자치도와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접경지역 인구감소 공동대응센터는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협력사업으로 추진하며 주관 기관은 철원군을 시작으로 향후 4개 군이 순차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철원=김대호기자 mantough@**

江原日報

2023년 06월 27일 (화)

사회 05면

이른 더위에 장마까지 ‘식중독 폭증’

무더위 속 장마가 시작되면서 식중독 예방에 비상이 걸렸다. 26일 강원특별자치도 보건 당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 사이 도내에서 발생한 식중독 환자는 총 173명으로, 이는 지난해 6월까지의 환자 8명에 비해 약 21배 증가한 수치다. 발생 건수는 24건으로, 지난해 2건보다 12배 늘었다.

올해 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학교 등에서의 발생 사례가 급증한 데 이어 최근에는 휴양지 횡집, 음식점 등에서 식사 후 감염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24일 강릉에서는 횡집 2곳에

**올해 도내 환자 173명
지난해보다 21배 급증**

**‘학교 급식’서 최다 발생
익혀 먹고 위생수칙 지켜야**

서 음식을 먹은 손님 각각 4명이 구토,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을 보여 병원을 찾았다.

앞서 지난 22일에도 강릉 시내 음식점에서 식사한 손님 6명이 동시에 식중독 증상을 신고, 강릉시와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올 5월에는 속초와 양구에서 급

식을 먹은 초등학교 6명, 9명이 복통 등의 증상을 호소해 연이어 식중독 신고 사례로 접수됐다.

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집계 결과 원인이 밝혀진 도내 식중독 사례 중에서는 노로바이러스 검출 사례가 66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학교급식에서 식중독 증상이 발생한 사례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에서 식사 후 손님이 식중독 증상을 보인 사례도 50건에 이르렀다.

보건 당국은 올해 더위가 빨리진 데다 최근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음식이 부패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

된다. 또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손씻기 등 위생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늘어난 것으로 보고 손씻기와 음식 익혀 먹기, 위생적인 조리 환경을 당부하고 있다.

전주미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감염역학과장은 “최근 발생 사례를 보면 음식을 더운 날씨의 상온에 오래 방치한 뒤 먹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음식 먹기 전 손 씻기, 음식은 익혀 먹고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상온에 오래 두지 않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서희기자 wiretheasia@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3년 06월 27일 (화)

사설/칼럼 19면

자치도 재정대책 다각적으로

-내부 줄라매기 한계, 교부세 법정률 제고 등 방안을

국세 수입 감소의 여파가 전국 각 지방 자치단체에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지급되는 지방교부세 중 1100억여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도에서는 행사, 연구, 조사 등 전문성이 필요한 용역계약에 대한 일괄 중단 조치 등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습니다. 도내 18개 시군도 비슷한 상황이어서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거나 불요불급한 경우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키로 하는 등 초긴축에 들어갔습니다.

향후 세수 전망도 밝지 않기에 그야말로 국고에 주로 의존하는 도와 시군으로서는 세출 급감 문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지방재정 지출이 줄어들면 지역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지역경제가 악화되면 지방재정지출이 감축되는 악순환을 가져오므로 지역사회로서는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지금과 같이 용역계약만을 대상으로 한 일방향이 아닌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아래 추진해야 효과적입니다.

일례로 자치행정에서 집행하는 각종 공공조달계약에 대해 효율화를 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공공조달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는 단지

부패방지 차원을 넘어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주로 거론되는 수의계약에서 분할계약 및 편법계약 등 자의적인 운영 개입이 자칫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원연구원에서 최근 '세외수입으로 강원도 재정을 개선하자'라며 정책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공유재산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기반으로 사용료와 대부료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현실화 등의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세외수입은 관련 법령이 복잡하지만 수익자 부담 원칙이어서 비교적 불만이 적고, 자치단체 운영 능력에 따라 발굴 및 확대가 쉬운 잠재적 재원이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재정수요가 급증하므로 도의 재정대책은 단기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자구노력이 병행돼야 하지만 시급한 대책은 중앙정부 재정지원 정책의 획기적 전환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대로 지방의 자립 역량을 높이려면 재정력 강화는 필수입니다. 도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 지방교부세 법정률 제고, 지방교부세 및 지방소비세 배분 기준 개선 등을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6월 27일 (화)

사설/칼럼 19면

정부 '일 오염수' 대국민 설명 있어야

-동해안주민 불안 확산... 국무총리 회견 필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해양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최근 해저터널을 파는 데 사용하던 중장비 철거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형 크레인이 달린 배가 오염수 방류 부분에 있는 중장비를 인양하면 방류를 위한 공사는 마무리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조만간 공개할 보고서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으면, 울려먹는 방류를 강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동해안 주민들의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상가 횃집들은 벌써 손님들의 발길이 끊겼으며 하소연합니다. 수산물 가공업체도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동해안 최대 산업인 수산업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치열한 공방을 벌입니다. 동해안을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야당은 방류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권은 '오염수 괴담'을 중지하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방류가 눈앞에 다가왔는데 정쟁만 벌이며 시간을 낭비한다고 비난합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 답하

는 정도의 입장 표명으로는 부족합니다. 오염수 방류의 심각성을 제기하는 주장이 '괴담'이라면, 괴담이 아니라는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국무총리가 나서 명확한 근거와 과학적 증거를 토대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를 밝혀야 합니다. 실시간 중계되는 기자회견을 통해 질문을 받고, 반대 측의 논리에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수산업의 침체를 차단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대국민 설득 없이 일본의 방류가 진행된다면, 한국 정부가 용인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오염수 방류는 동해안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수산업의 미래와 연결된 사안입니다. 수산업은 주민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일단 오염수가 방류되면, 실질적 유해 여부와 상관없이 수산물 기피 현상이 확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리적 요인은 지역 수산물 소비 위축은 물론, 관광 산업에도 타격을 줍니다. 정부는 이런 엄중한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불안 심리를 없앨 수 있도록 실상을 명명백백히 공개해야 합니다. 유야무야, 여야간 정쟁으로 치부해 넘어가서는 안 될 일입니다.

江原日報

2023년 06월 27일 (화)

사설/칼럼 19면

여야, '日 오염수 방류' 대결 접고 대책을 내놔야

정치권이 3개월째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대립을 이어 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강릉 세인트존벤션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질타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염수가 동해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서울을 시작으로 한 달간 전국을 돌며 오염수 투기 반대 집회를 여는 등 장외 여론전을 강화해 나간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장외 투쟁을 두고 맹비난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돌팔이 약장수가 전국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검증되지

않은 약을 판매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오염수를 방류하는 주체는 일본인데 우리 정치권은 돌로 갈라져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를 직계 가족과 같이 드시라”고 하는 등 낮뜨거운 말이 튀어나왔다. 정부 여당의 대응도 웅색하기는 마찬가지다.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기 바쁘다 보니 일반 국민의 눈에는 일본 편만 드는 꼴로 비친다. 인간의 기술은 완벽하지 않고 오염수 방류의 당사자인 도쿄전력 측도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하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나서 ‘과학적으로 괜찮다’고 말하는 게 일본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일본 측

이 제공하는 정보만으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특히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오염수 문제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그간의 대응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방사성 물질의 안전성은 아주 극소량일지라도 최대한 엄격하게 이해되고 해석돼야 한다. 이라는 사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수산물 취급의 업종 전환 소식이 들린다.

여기에다 초유의 소금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유통

업계는 방사능 검사기를 도입하고 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에 결정됐다. 당시 정부는 반대 입장을 내놨지만 그 이후 후속 조치가 없

**‘돌팔이 약장수’ ‘직계 가족과 마셔라’ 등 공방
수산물 취급소 업종 전환 움직임 등 ‘파장’
국민 불안 해소될 때까지 방류 중단 요구를**

었다. 즉,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도 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선동 행위는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이 많은 비판을 받는 이유는 방사성 물질의 유해도뿐만 아니라 결정 과정에서 객관성·투명성·공정성이 결여됐기 때문이다. 우선 현재 분석 예측되고 있는 연구 결과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에 뒀어야 한다. 국내 오염수 피해 대책은 미리 세워 두고 국민의 혼란과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일본 정부에 오염수 방류를 중단해 줄 것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그게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길이다.

江原日報

2023년 06월 27일 (화)

사설/칼럼 19면

도내 빈 점포 급증... 지역상권 붕괴 막을 대책을

도내 주요 상권 상가 공실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 빈 점포는 2021년보다 더 늘었고 투자 수익은 반 토막났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분석한 결과 도내 올해 1분기 중대형 상가(3층 이상, 면적 330㎡ 초과)의 공실률은 15.3%로 조사됐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1년 1분기 공실률(13.9%)을 웃돌았다. 도내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코로나 전인 2019년 1분기만 해도 11.7%에 불과했다. 1~2층으로 구성돼 비교적 공실이 적은 소규모 상가 역시 1분기 공실률 7.3%를 기록, 2년 전(6.6%)보다 올랐다. 중대형 상가는 통상 '일반상가'로 불리는 건축물이다. 소상공인 종사 비율이 높은 옷가게, 음식점 등이 입점하는 만큼 경기 여건에 따른 소상공인의 체감도를 파악하는 척도로 활용된다.

지역별로는 춘천 명동 중대형 상가의 1분기 공실률이 23.8%로 2021년 같은 기간(18.5%)보다 급등했다. 명동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도 2년 새 4.9%에서 7.2%로 올랐다. 장기 미개방 점포를 포함하면 실제 공실률은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터미널 일대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021년 1분기 4.3%에서 2년 만에 14.5%로 치솟았다. 원주혁신도시의 올해 1분기 집합상가 공실률도 18.4%에 달해 여전히 경기 침체의 영향

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릉 주문진항의 중대형 상가는 2년 만에 공실률 9.0%에서 14.9%로 상승했다. 강원지역 상가 투자 수익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도심이 이 정도면 외곽지역은 훨씬 더할 것이다. 풀뿌리 경제가 그야말로 흑한기를 맞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상가 공실률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황이다. 최근 2년여간 조세 및 부담금 증가로 가게 가처분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소비와 함께 자영업 매출은 위축된 반면 상가 임대료는 좀처럼 낮아지지 않아 기존 영업자가 영업을 포기해도 신규 진입자가 없다는 것이다. 소비 패턴 변화도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의류·잡화·화장품 등 매출이 겹치는 부문에서 온라인쇼핑 규모가 급증하면서 오프라인인 소규모 자영업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 부작용 역시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 고용 여건 악화로 젊은 세대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것도 상권 퇴보에 영향을 줬다. 가게들이 줄지어 문을 닫고 있다. 더욱이 한번 높아진 공실률을 다시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 부작용을 해소하고 지역 상가에 고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상인들과 함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